

통합특별시 집행부 조직개편안의 문제점

□ 現 집행부 조직개편(안)의 문제점

- 조직개편 초안(7. 9. 타운홀 미팅 제안) 보다는 기관유지 기능의 배분을 고려했으나, 반도체 투자 광주 확정(7. 6. / 800조 투자) 효과 미반영
 - ⇒ **광주로의 장기적인 경제력 및 인구집중 효과가 분석·반영되지 않음**
- 통합 전 전남과 광주의 재정상태와 이에 대한 책임, 어디에서 기관유지 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등 행정 역량을 고려하지 않음
 - ⇒ **통합 전 광주는 채무비율이 약 25.61%로 과다한 채무와 더불어 기본적인 도시 운영과 국비 매칭에 필수적인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**
 - * 통합 전 광주의 채무는 2조 2,253억원으로 주로 지하철 2호선과 도시공원 조성 등 대형사업이 그 원인이나 특히 지하철 2호선 사업비가 당초 1조 7천억원이었으나 2026년 7월 현재 3조 2,450억원으로 공사비 증가
 - ⇒ **시도 통합으로 통합특별시 기준 채무비율은 약 16.25%로 낮아졌으나 광주의 부실한 재정상태로 인한 통합특별시 지출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전남지역 피해 불가피**
 - ⇒ **전남과 통합이 없었다면 광주는 올 하반기 도시 운영에 필수적인 3,808억원 부족으로 도시기능 마비, 이 금액은 매년 반복적으로 부족한 금액으로 광주에 통합특별시의 기관유지기능 부여는 철저한 재검토 필요**
 - * 초중고 무상급식비 245억원, 시내버스 준공영제 503억원, 교육재정교부금 1,000억원, 제2순환도로(민자) 지원금 228억원, 의료급여기금전출금 232억원, 재난관리기금 91억원, 기타 국비매칭사업비 1,398억원 등이며 매년 반복적인 부족액으로 예상됨
- 올 하반기 전남지역으로 지출되어야 할 예산이 광주지역으로 지출*되고 있고, 내년부터는 통합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전남지역 시군 예산 삭감 불가피
 - ⇒ **이에 대해 최소한 행정 주기능이 전남으로 와야만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을 수용하도록 시민 설득 가능**
- 조직개편 초안은 지역간 경제력(GRDP) 격차가 반영되지 않음
 - ⇒ '23년 역내 총생산은 전남 동부 60조, 전남 서부 19조, 전남 북부 19조, 광주 52조
 - * 전남도청 서남권 이전 후 20년이 지나도 서남권은 광주·전남동부의 1/3 수준

- 시도통합에 대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약속(균형발전과 상생) 위반
 - ⇒ 부담은 전남에 나눠지게 하고, 혜택은 광주로만 집중되는 구조
 - * 전남의 농업용수·재생에너지는 광주에서 사용, 전남은 군공항과 채무(2조 2천억)
- 행정 주기능 광주 집중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부정적 효과
 - ⇒ 시도 통합 혜택이 편중될 경우 대전·충남 등 다른 지자체 등 통합 반대
 - * 통합으로 균형발전이 가능한지 전남·광주 사례를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지켜본 모든 지역(노조)이 통합에 부정적
- 공무원 수 일부 증원은 서남권 소멸을 막을 수 없는 미봉책
 - ⇒ 20년전 전남도청과 함께 내려온 기관만 77개로 이 중 선관위는 이미 광주로 이전, 나머지 76개 기관들도 행정 주기능 배치에 따라 이전 준비중
 - * 77개 기관 이동시 무안은 최소 2~3만명 이상 인구 감소 예측
- 행정 주기능 광주 집중은 전남소멸 가속화시키고 지역감정 발생
 - ⇒ 광주는 경제·의료·문화·교육 등 대부분 분야에서 이미 실질적인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으나, 서남권은 산업기반이 거의 없고 행정기능이 전부임
 - * 행정통합으로 빈익빈 부익부 초래시 강력한 지역갈등 초래
- 통합으로 더 큰 혜택을 보는 쪽이 더 큰 양보를 하는 것이 공정한
 - ⇒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기초
 - * 광주의 불이익은 반도체 등 경제적 보상으로 설명 가능하나 전남은 설명 불가
- 반도체 공장의 빠른 착공을 위해서는 행정 주기능을 전남에 양보해야만 군공항 조기 이전에 대해 전남(무안 포함) 지역 시민들 설득 가능
 - ⇒ 착공이 늦어지고 '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 실시되면 정치적 변수 발생
- 현재의 균형이 10년 후에도 양 지역의 균형이 유지되는 방안인지 검토 필요
 - ⇒ 반도체 완공으로 인한 광주로의 인구·경제력 집중효과 감안시 전남에 행정기능을 남기지 않는다면 10년 후 전남 소멸 예상

□ 행정기능 배분의 새로운 기준 필요

- 반도체 광주 확정 후에는 광주는 경제, 전남은 행정이라는 새로운 균형 필요
 - ⇒ 해외에서도 균형발전 위해 행정수도와 경제 중심지를 분리시켜 운영
 - * 미국(워싱턴 VS 뉴욕), 호주(캔버라 vs 시드니), 캐나다(오타와 vs 토론토), 브라질(브라질리아 vs 상파울루), 네덜란드(암스테르담 vs 헤이그)

참고 1

전남광주 2026년 하반기 법적 의무경비 상세현황

< 2026년 하반기 재원전망 세부내역 >

(단위 : 억원)

구분	세입(일반재원) (A)	세출(필수경비) (B)	부족재원 (A)-(B)
합계	1,381	5,322	3,941
광주	381	4,189	3,808
	-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200 - 지역상생발전기금 31 - 기금여유자금 차입 150	- 법정·의무적경비 2,791 - 교육재정교부금 1,000 - 학교무상급식비 245 - 시내버스준공영제 503 - 제2순환도로(민자) 재정지원 228 - 의료급여기금전출금 232 - 재난관리기금 91 등 - 국고보조사업 등 매칭 1,398	
전남	1,000	1,133	133
	- 보조금반환수입 650 - 지역상생발전기금 150 - 예비비 200	- 조정교부금 정산분 30 - 지방교육세 612 - 교육재정교부금 203 -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60 - 벼경영안정대책비 228	

참고 1

전남광주 2026년 자금배정 현황 및 광주 상위 10개 사업

□ 2026년 7월 자금배정 현황

* 2026년 7월 전입금(광주→통합특별시) 1,400억원

(단위 : 억 원)

총액 (A)	(구)전남		(구)광주	
	배정액 (B)	비율 (B/A)	배정액 (C)	비율 (C/A)
14,340	7,678	53.5%	6,662	46.5%

□ [구]광주광역시 자금배정 상위 10개 사업

(단위 : 억 원)

순번	부서명	사업명	금액
	계		3,649
1	예산총괄관	조정교부금지원	969
2	돌봄정책과	기초생활보장급여	558
3	고령사회정책과	기초연금지원	577
4	장애인정책과	장애인활동급여	260
5	인사정책관	연금부담금	241
6	고령사회정책과	노인장기요양보험	222
7	교육지원정책과	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	212
8	대학인재정책과	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구축	210
9	광역교통과	지방채증권원금상환	200
10	고령사회정책과	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	200